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실명제

환경부는 구랍 5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참여한 기술자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실명제'를 실시하라고 전국의 88개 환경영향평가회사에 지시했다.

환경부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향평가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막기 위해 평가실명제를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책임자와 평가에 참여한 기술자를 명시해야 하며 사후 부실평가로 적발되면 평가대행회사가 업무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평가업무중 일부를 하청출 때에는 하청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실명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일부 악덕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평가서를 서로 베끼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다 환경부에 적발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만도 94년 이래 5개사로 모두 업무정지 또는 경고 등의 처벌을 받았다.

(주)창신종합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쌍용엔지니어링(주) 등 3개 대행회사는 유사사업에 대한 기존 평가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거나 비전문가의 의견을 전문가의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돼 각각 1개월간의 업무정지를 당했다.

또 (주)대우엔지니어링과 (주)금호엔지니어링 등 2개사는 불확실한 내용을 확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다 적발돼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해양환경 모니터링망 3년간 확충

환경부는 구랍 9일 기름유출 및 오염물질 투기로 해양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96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해양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측정항목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21개 항목 이외에 다이옥신, PCB(폴리클로로네이티드비페닐), 할로젠 화합물 등을 추가해 오염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중인 '해양환경 모니터링 3개년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해수의 오염도 검사해역을 현재 69개에서 서해에 11개를 추가, 80개로 늘리고 채수지점도 2백91곳에서 88곳을 늘려 3백7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97년에는 남해의 31개 해역을 추가해 조사해역을 1백11개로 늘리고 채수지점도 1백69곳을 늘려 총 채수지점을 5백48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마지막 연도인 98년에는 동해의 18개 해역(채수지점은 94곳)을 오염조사구역으로 추가 설정해 전국의 바다오염 측정해역을 1백29개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오염 측정망 확충계획이 마무리되는 98년에는 전해상의 채수지점이 6백42곳으로 늘어나 현재의 2백91개 채수지점보다 배이상 늘어난다.

환경부는 또 종전에는 바다의 표면수만 오염도 검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해수의 중층수 및 심층수, 해저 퇴적물, 어패류도 검사대상에 포함해 해양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환경기준 완화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박동서)는 구랍 12일 농공단지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는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이 개선안은 그동안 연료사용량과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업종에 상관없이 입주를 금지하던 것을 바꿔 유해성이 크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선 입주를 허용토록 했다.

또 개선안은 환경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고체환산연료 연간 2천t의 제한규정을 폐지하되 지정고시지역에서도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제한 없이 입주를 허용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수검원서 교부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양 중금속 오염 측정망 확충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망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구랍 8일 중금속 오염이 광산 일대 등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등 한계농도에 접근함에 따라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지점을 앞으로 10년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87년 이래 전국적으로 5백 22곳의 오염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오염도 조사지역을 내년에 7백80곳으로 늘려 오염 정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수은, 카드뮴 등 현행 6종의 오염물질에 불과한 검사항목도 올해부터 확대 조정해 모두 11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전의 검사항목중 오염사례가 거의 없는 아연을 빼고 새롭게 ▲발암성 물질인 PCB(폴리클로로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6가크롬 ▲유기인 화합물 ▲유류성분 등 6종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이 심한 물을 이용해 영농을 하거나 금속폐기물 매립지역 및 광산 부근을 신규조사 지점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염조사 지점을 올해부터 10년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오는 2005년에는 모두 3천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자적인 측정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향후 10년 동안 모두 7천곳의 지방측정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토양측정 지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조사지점이 적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토의 중금속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94년에 실시한 토양오염조사에서는 금속을 캐는 광산 일대에서 아연농도가 최고 2백77ppm까지 나타나 농작물이 생육피해를 받는 한계치인 3백25ppm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납은 2백47ppm(생육피해 한계농도 4백50ppm), 구리는 87ppm(한계농도 1백25ppm)까지 검출됐다.

환경부는 올해에 확대실시하는 오염조사 결과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에 대해서는 객토사업 등을 통해 토양을 복원하고 인근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염지역에서 생산한 곡물과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금속 함유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식품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농림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광산 및 산 환경관리인. 1995. 1

업체 등 중금속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토양정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 원인자 책임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공간관리법’ 제정 추진

지하상가와 역사, 백화점을 포함한 실내공간의 공기질을 규제하는 ‘실내공간관리법’이 올해 제정된다.

환경부는 구립 13일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통합,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간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 정하되 행정능력을 고려해 숙박시설, 판매시설, 영화관, 체육관 등 연면적 1천㎡ 이상되는 전국 6만3천여개의 건물중 우선 1만-2만개소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을 현행 지하환경기준 권고치에 따라 먼지의 경우 1일 3백 μg/m³ ▲이산화탄소 8시간 1천ppm ▲납 3 μg/m³ ▲포름알데히드 1일 0.1ppm ▲일산화탄소 8시간 20ppm 등 14개 항목별로 규제할 예정이다.

또 이 법안에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최저환기율 기준을 설정하고 환기율의 결정은 수용인원의 호흡공기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환경부는 건축물 설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적합하게 짓도록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간편한 사전협의절차를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하고 이들이 실내 환경관리인을 선임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시에는 위탁자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실내공간관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공기질 기준 또는 최저환기율에 부적합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개선명령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실내공기질오염부담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부실 환경오염 측정기관 적발

오염물질의 농도를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기관의

21%가 부정확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은 구랍 14일 전국 58개 공공기관, 74개 오염측정 전문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측정의 정확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21%인 28개 검사기관의 측정오차가 정답과 $\pm 20\%$ 의 편차를 보이는 부실한 측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측정오차가 엄청난 이들 검사기관중에는 경기도 성남시와 경북 구미시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함돼 있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오·폐수 오염도 조사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이에 따라 부실 측정기관 28곳의 관련 기술진을 소집해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또 측정의 오차가 $\pm 30\%$ 를 넘는 원일환경(주) 등 11개 불량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소집교육과 함께 현지에 점검반을 투입해 검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이와 함께 측정오차가 $\pm 20\%$ 를 초과하는 28개 검사시설의 명단을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에 통보하고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매년 농도가 분명한 오염측정 시료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국내 공공검사기관 및 민간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수질 등의 오염치 측정능력을 심사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측정능력을 검사한 결과 측정오차가 $\pm 10\%$ 이내일 때는 '우수', $\pm 20\%$ 이내면 '양호', $\pm 20\%$ 를 초과하지만 $\pm 30\%$ 이내면 '보통'으로 각각 분류하고 이마저 초과하면 '불량'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측정능력이 부실한 검사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등 제재수단이 없어 부정확한 오염 측정치가 여과없이 발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측정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량판정을 받은 11개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 원일환경(주) ▲ 관동환경(주) ▲ 한성환경산업(주) ▲ 진덕환경엔지니어링(주) ▲ 세기환경(주) ▲ 국제공해측정(주) ▲ 국제엔지니어링(주) ▲ 한성환경산업(주) ▲ 명보환경(주) ▲ 삼봉환경(주)

소규모 폐유배출자도 신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월평균 50kg 이상의 폐유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공해배출 신고를 관할 자치단체에 해야 한다.

환경부는 구랍 1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모범이 발효되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질오염사고의 주요물질인 폐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월 5백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월 50kg 이상 배출사업자로 확대했다.

또 공장 등 폐기물을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스스로 연간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총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해나가도록 했다.

이들 대형 사업장이 특수처리가 불필요한 일반쓰레기를 하루 평균 3백kg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규격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는 종량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피가 큰 스티로폴 쓰레기를 다량 발생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대형 백화점, 도매센터 등은 스티로폴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특성을 감안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독립 전문업종으로 분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물의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재생처리업 및 종합처리업을 신설하고 그 허가요건을 정했다.

즉 재생처리업은 법인인 경우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재산과 함께 운반차량을 갖추도록 했다.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 10억원 이상, 개인은 2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재산과 불도저 등의 중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한편 모범 개정시 설치비용이해진 쓰레기 소각시설의 성능요건을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강화해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를 종전의 7백도에서 8백도로 높이고 하루 처리능력 50t 이상의 소형 소각로에도 계량기

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소각효율을 측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침출수의 유출 등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매립시설 차수막의 두께를 1mm 이상에서 1.5mm 이상으로 높이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인터넷에 '한국의 환경' 5월 개설

환경부는 구랍 16일 올해 5월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망인 인터넷에 '한국의 환경'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정책 및 통계, 환경비전 21 등 환경에 관한 정보를 띄워 홍보와 정보교환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점차 블록화, 단일화해 가고 있는 '지구촌시대'에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키 위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OLIS(On Line Information System)'에 등록, 선진국의 환경정책 및 기술자료를 수집, 배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인터넷과 'OLIS'에서 수집한 ▲미국의 환경정책 5개년 계획 ▲OECD 환경·경제정책 통합에 관한 진행보고서 ▲지구환경 논의동향 분석 자료집 ▲환경·무역연계 논의동향 및 용어해설집 등을 번역해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정환경지도 강화

올해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생산공정에 대한 청정환경기술 지도와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환경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구랍 1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대학과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산업환경개선협의회'를 지역 단위로 발족시켜 중소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체계 확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또 염색, 도금, 화학 등 업종별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과 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통해 각종업종의 생산공정 표준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밖에 생산공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환경관리인. 1995. 1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설비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공업발전기금과 산업은행자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기술개발자금 등에서 1천3백3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정제품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첨단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국산설비 투자액의 10%와 외국산 설비 투자액의 3%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특히 외국의 청정기술 도입을 위해 '테크노마트'를 적극 활용,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의 청정기술을 전수받는 한편 올해 5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환경산업협회(EIA) 환경제품 전시회 등에 업계대표, 관리들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국립화학물질 정보센터 설립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독 화학물질에 관한 유통 및 안전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국립화학물질 정보센터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구랍 21일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화하면서 그 유통량이 급증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에 화학물질 정보센터를 설치해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중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화학물질 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정보센터가 설치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민간단체, 연구기관의 국내 정보 및 국제기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게 된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 판매, 수출입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업체별로 파악해 이를 기초자료에 입력함으로써 유출사고 등 유사시에 신속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업체 7천여 곳중 94년 1차로 7백73개업체를 대상으로 취급량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는 5천곳, 97년에는 나머지 1천3백여곳을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조사를 통해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화학물질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향후 사고방지 등 안전관리 대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현재 3만1천종에 달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1천6백5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은 매년 신물질이 개발되면서 그 종류가 급증, 오는 2000년에는 4만1천종, 2005년에는 5만종 등 그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인체 및 환경을 보호하는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비전 21’ 확정

경제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린 GNP(녹색국민소득)’의 도입, 녹색도시의 조성, 식수 전용댐의 건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10년간의 환경보전 계획을 담고 있는 ‘환경비전 21’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구랍 18일 96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10년간 환경개선 투자재원으로 총 77조원을 책정한 ‘환경비전 21’을 확정하고 이를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

21세기의 환경청사진을 담은 환경비전은 지난 6월 초안이 세추위에 보고된 뒤 범정부적인 논의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으로 확정됐다.

이 비전은 향후 10년간 이룩할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비전에서 환경친화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의 훼손여부가 국민소득에 반영된 그린 GNP를 거시경제지표로 개발해 경제정책의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환경기준을 2005년까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고 울산등 오염이 극심한 지역은 아황산가스, 먼지 등의 발생한도를 설정하는 총량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화로 늘어나는 지하 및 실내 생활공간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97년까지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

고 개펄을 보호하고 육상의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연안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해 98년까지 연안역 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소득의 증가로 급증하는 환경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통선 부근 파주군 장단면 통일촌과 대전시 둔산지구 등 5개 신도시를 생태도시 시범지역으로 설계하는 등 2005년까지 자연생태계 본래의 모습에 가까운 ‘21세기형 녹색도시’(Eco-Polis)를 10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오는 2005년까지 다목적댐 8개소를 개발해 장기가 물이 발생하더라도 식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주변에 식수 전용댐을 2-3개씩 건설, 각종 재해시 최소한의 식수를 공급하게 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물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 원가의 40%에 머무르고 있는 수도요금을 99년까지 원가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용한 물을 간이정수해 재사용하는 중수도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증가추세를 보이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해 처리비용의 40%에 불과한 쓰레기 수수료를 2001년까지 실비수준으로 인상하고 전국에 소각시설 2천5백77개를 설치해 현재 4%에 불과한 생활쓰레기 소각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쓰레기를 전량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차 5개년 계획(97-2001)을 내년중에 수립해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 향후 10년동안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21세기 환경비전 주요 계획

깨끗하고 넉넉한 물과 쾌적한 하천

■ 맑은 물의 확보

▲ 먹는 물의 수질기준 강화

	1995	1998	2005
기준항목수	45	85	120

▲ 고도정수처리시설 계획

계	1996	1997-2001	2002-2005
28	12	9	7

- ◆ 충분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
- ▲ 새로운 상수원의 개발

사 업	계	1996	1997-2001
다목적댐 개발	8	1	7
식수전용 저수지	1	-	1
광역상수도	19	4	15

▲ 노후 수도관 교체

(단위 : km)

계	1996	1997-2001	2002-2005
29,400	7,445	14,115	7,840

- ◆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 ▲ 하천환경 정비

(단위 : 개소)

	계	1996	1997-2001	2002-2005
하천환경 정비사업	7	46	300	355

▲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단위 : 개소)

	계	1996	1997-2001	2002-2005
폐수종말처리시설	53	2	40	11
분뇨 처리시설	149	30	73	76
축산폐수처리시설	100	11	50	39

푸른 하늘과 상쾌한 공기

- ◆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 ▲ 중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단위 : g/kWh)

	질소산화물	먼 지	비 고
시내버스	11→9	0.9→0.5	1998년
경유 중량차	11→6	0.9→0.15	2002년

- ▲ 환경친화적 에너지체계 구축
- 액화천연가스(LNG) 공급확대 계획

	1995	2001	2005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공급량(천t)	6,300	11,600	14,800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대

환경관리인. 1995. 1

	1995	2001	2005
열병합발전시설(곳)	15	33	45
지역난방보급률(%)	6.5	14.9	25.3
소각폐열재활용률	10.0	21.0	34.0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살리는 사회

- ◆ 재활용산업의 육성
- ▲ 폐자원의 이용목표

(단위 : %)

품 목	1995	2001	2005
폐 지	47	55	60
폐 유리병	42	52	60
폐알루미늄캔	20	40	45
폐플라스틱	5	20	25

▲ 소각시설의 확대

	계	1996	1997-2001	2002-2005
대형 소각시설	187	4	46	137
소형 소각시설	2,390	63	1,324	1,003
위생 매립시설	27	5	15	7

자연환경의 보전

- ◆ 도시 녹지공간의 확대
- ▲ 생태도시 조성계획

계	1996	1997-2001	2002-2005
10곳	-	5곳	5곳

- ◆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
-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확충

계	1995	2001	2005
50곳	7곳	23곳	20곳

- ◆ 토양보전 및 휴·폐광지역 관리강화
- ▲ 토양측정망 확충

(단위 : 개소)

계	1996	1997-2001	2002-2005
9,478	258	1,160	8,060

- ◆ 연안해역의 환경보전
- ▲ 오염우심지역의 환경복원

	계	1996	1997-2001	2002-2005
해저준설해역	7곳	3곳	4곳	-
수산폐수처리장	10곳	-	5곳	5곳